

최근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국방개혁 2.0》 추진에 필요한 첨단무기들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려 하고있다고 한다.

지난 2월 《방위산업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무기부속품의 《국산화》를 위한 제도적기반을 마련한데 기초하여 군부호전세력들은 각종 고성능량과 30mm파워포사포개발 및 대량생산, 고동훈련기의 개량형과 소형무장정비기개발 및 생산, 정찰위성개발, 단거리해상대공중미사일, 잠수함탄발형중거리 미 등의 대량생산을 다치고있다고 한다.

한편 2020년중에 《미래 8대국방핵심기술》, 《10대 군사능력》, 《30개 핵심전력》의 실정을 완료하겠다고 떠들면서 《드론봇》 전투체계, 지능형전투함 등 미래형 첨단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분주함을 피우고있다고 한다.

# 전쟁무기를 만드는 거대한 야장간

이것도 모자라 호전세력들은 민간기업들이 가지고있는 첨단기술과 생산잠재력을 써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국회》에서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을 통과시켜 민간기업들이 무기개발에 적극 나설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하였다. 단거리해상대공중미사일, 잠수함탄발형중거리 미 등의 대량생산을 다치고있다고 한다.

조선반도정세를 긴장격화로 몰아가는 무모한 처사가 아닐수 없다. 따지고보면 남조선군부대장이 광고하는 방위산업정책이란 공화국과 힘으로 맞서려는 흥심을 다시금 적라라하게 드러내놓은 또 하나의 음흉한 대결정책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남조선군부가 개발도입하고있는 첨단무장장비들은 그 성능과 기술적제원에 있어서 명백히 공격형, 타격형, 침투형 무기들이다. 이런 방위 무기개발과 생산이 적극 참가시키는 문제를 토의하는 등 민간기업들을 무장장비개발에 끌어들이려 하고있다고 한다.

아았서는 동족대결의 칼을 갈고있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의 이중적태는 그 무엇으로써도 용납될수 없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군수기업체들도 모자라 민간기업들까지 무장장비개발에 끌어들이고서 남조선명을 버리는 거대한 야장간으로 만드는 무분별한 망동이다. 상전에 군통수권마저 빼앗기고 철저히 종속되어있는 남조선군이 아무리 첨단무장장비들을 개발도입해도 차폐되는것은 상전의 전쟁대포반신에 일것이다. 남조선의 평화지향에 역행하여 시대착오적인 대결망상을 실현해보려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의 무모한 침략전쟁장비개발도입책동은 내외의 저주와 규탄만을 불러일으키게 될것이다.

리철영

# 남조선 각계가 다양한 투쟁 전개

남조선 각계에서 《한미실무그룹》을 통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방해행동을 규탄배격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있다.

민중구혁정당들은 《한미실무그룹》이라는 괴물이 조작된 이후 북과 남이 합의 하였던 모든 사안들이 출몰이 취소되어 북남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하면서 그의 해체문제를 적극 들고나오고있다고 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주로총을 비롯한 18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8.15민중자주대회추진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남조선미국 《실무팀》회의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것을 간섭하고 방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울가미라고 까뻐하였다.

기자회견장에서는 《한미실무그룹 해체하라!》,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라!》 등의 대항구호수백들이 등장하여 많은 관심을 끌었다고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과 시국선언발표, 현수막걸기, 언론기고, SNS활동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부문제의 자주적인 해결을 바라는 남조선민심의 요구가 반영되어있다.

《김일당 공조》의 간판을 내걸고 남조선에 《속도조절》을 강박하는 등 민족내부문제를 대한 간섭을 일삼고있는 외세의 책동이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로 부터 규탄과 배격을 받고 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체제는 남북합의를 실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조선반도정세를 되돌릴수 없는 대결상태로 몰아넣는것으로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해나오고있다.

이와 함께 긴장완화와 평화실현, 전쟁중지를 위한 반공화국적대대정책의 철회를 강하게 주장하고있다.

얼마전에도 《싸드배치반대 김치대책위원회》,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시민모임》 등 지역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은 《싸드》의 추가배치반대와 미군기지제공장폐쇄 등을 요구하여 도보행진, 모형물개부시기, 성조기불태우기를 비롯한 각종 반미투쟁들을 벌여왔다고 한다.

본사기자

최근 남조선에서 부동산문제 제로 하여 사회가 혼란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언론들이 빙글빙글 돌며 남조선에서는 지난 몇년사이 서울과 경기도, 인천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집값이 무려 50%이상이나 뛰어들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집값이 내려가지 않아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속에서는 (내 집 마련의 꿈)이 하나의 공상으로 되고있다.》는 비탄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에서 집값이 대폭 상승하여 부동산시장이 혼란에 빠진것은 씩씩대로 씩씩은 남조선사회제도의 반인민적성격과 부패상의 집중적인 반영이다.

부익부, 빈익빈의 남조선사회에서 극소수의 돈많은 특권층속들이 부동산을 비리사육과 치부를 위한 수단

남조선 각계층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주택문제를 해결한다고 내놓은 각종 대책을 실효성이 없는 민심기만용, 실패기적방이라고 비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을 무조건 처리하여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주택취득세인하 등의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와 반민 《미래통합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해당 관계자들을 사퇴시키라고 떠들고있고 있다.

이를 두고 언론들은 배부른 자들의 한갓 남탕하는 심경이 들끓고있다. 남조선의 여야정치인들은 특권층속들로서 집값이 고생하는 인민들의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이번에도 《국회》에 당선된 여야의원들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자들이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있다는것은 그들이 어떤 계층인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러한 정치시정배들이 판을 치는 남조선사회에서 주택값이 폭등하고 근로로대생의 생활고도 가중되는것은 언제 가도 해결될수 없는 고질적인 사회적병폐이다.

여야정치인들이 부동산문제를 놓고 민심을 얻어보겠다고 수다를 떨었지만 그럴수록 민심은 씩씩더 뜨겁게 끓어올라고 있다.

본사기자

#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하여

# 범종적인 《3선개헌》을 반대하여

남조선에서 독재자의 장기집권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박정희역도는 파쇼독재유지와 장기집권을 위한 범종적인 《개헌》을 모를 꾸미었다. 독재 세력이 1969년 2월초 《민중공화당》의원총회에서 《3선개헌안》이란것을 공개하자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는 또다시 폭발하였다.

1969년 2월 5일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의 학생단체대표들과 여러 애국적청년단체대표들은 선언문을 발표하여 《3선개헌을 또 하나의 쿠데타로 인정하고 그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것》을 선포하고 단호한 투쟁결의를 밝혔다.

6월 12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수백명 학생들이 《3선개헌반대 범종파대학학생총회》를 열고 박정희역도의 장기집권을 모를 폭로규탄하고 남조선청년학생들에게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할것을 계기로 《3선개헌》반대투쟁이 시작되었다.

이 호소에 화답하여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서울의 각 대학들에서 투쟁이 일어났는데 이어 대구,

마산, 광주, 목포, 전주, 대전, 청주, 인천, 수원, 강릉, 제주 등 남조선전역에서 청년학생들의 대중적인 《3선개헌》반대투쟁이 벌어졌다. 투쟁에 떨쳐나선 청년학생들은 《민주주의로 향하는 전 국민의 념원이 일부 수자의 권력욕앞에서 회생될수 없다.》, 《이제 우리의 민족력은 다시금 새로운 피의 투쟁을 부른다. 민족의 분열과 민족정신의 파괴를 초래하고있는 그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도 이의 분쇄를 위한 피의 투쟁은 우리를 자신의 송고한 의무이다.》라고 부르짖으며 시대애국적인 투쟁을 반대하여 더욱 과감히 투쟁하였다.

청년학생들은 《3선개헌 결사반대한다》, 《3선개헌은 4.19의 모독이다》, 《반독재, 반개헌》 등의 구호를 들고 투쟁의 광장에 떨쳐나오기 시작했다.

반파쇼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대중적투쟁은 정계와 사회 각계의 지지를 받았다.

야당인 신민당과 《정치활동정화법》에 의하여 정치활동을 금지당해왔던 재야인사들에 의해 7월 17일 《3선개헌반대 범종파대학학생총회》가 결성되었다. 여기에는 신민당, 대중당, 통일사회당, 민주당, 《한국독립당》, 자유당 등 6개 야당과 《정치활동정화법》관련자, 종교계, 법조계, 학계, 언론계, 4.19 및 6.3단체 대표들이 망라되었다.

투쟁이 확대강화되는데 질질한 박정희

대국도당은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막아보려고 7월 중순부터 《정치방학》을 강요하였으며 7월 25일에는 이른바 《특별담화》라는것을 통하여 《3선개헌안》을 기어이 성사시킬것을 로골적으로 들고나왔다. 그후 9월 14일에는 야당의원들이 다 잡은 사이에 회의장을 옮겨 새벽 2시 55분에 《민주공화당》의원들만이 모인 《국회》에서 불과 6분만에 《개헌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 《개헌안》의 골자는 두 번이상 권력이 《대통령》을 할수 없게 되어있던 《헌법》의 규제조항을 세번까지 할수 있게 끌어 고친것이었는데 이것은 박정희역도가 1971년 선거에서 세번째로 《대통령》감투를 눌러쓰겠다는 강도적의사표시였을뿐아니라 영구집권을 하려는 흉악한 속심을 드러낸것이었다.

7월 중순부터 산발적으로 벌어지던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계교를 전후한 8월 20일부터 또다시 대중적으로 벌어졌다.

이들은 《박정희는 리승만



《3선개헌》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선 남조선청년학생들

# 친일애국노들의 눈뜨고 볼수 없는 망동

최근 남조선에서 지난 수십년동안 진행되어온 《반일수요집회》를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세력간의 대립이 격화되고있다.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와 같은 친일보수단체들이 정외기억연대(정의의)와 진보단체들이 《반일수요집회》를 정치적목적에 리용해왔다

이것은 친일애국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후예들이 친일굴종의 추태이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일본의 특대형반인륜범죄에 대한 철저한 사회적 배상을 받아내려는 거리의 요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된다.

남조선언론들도 친일보수페당의 망동을 두고 《친일을 정당화하고 일본의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진보적인 반일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켜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평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반일투쟁을 멈추지세워보려고

본대사관앞에 성노에소년상이 처음으로 세워진 후에는 일본의 특대형반인륜범죄를 단죄규탄하는 성토장으로 국제사면에 널리 알려져왔다.

《자유연대》,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페당은 친일보수단체들을 동원하여 맞불집회까지 벌여놓았다는것이다. 이것은 친일애국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후예들이 친일굴종의 추태이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일본의 특대형반인륜범죄에 대한 철저한 사회적 배상을 받아내려는 거리의 요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된다.

남조선언론들도 친일보수페당의 망동을 두고 《친일을 정당화하고 일본의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진보적인 반일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켜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평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반일투쟁을 멈추지세워보려고

친일파들이 극악무도한 망동을 부려대고있지만 정의의를 비롯한 진보단체들은 《일본이 무릎꿇고 사죄하는 날까지 반일집회를 멈추지 않겠다.》는 구호를 웨치며 투쟁을 벌이고있는것도 그러한 의로운 활동의 하나이다.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특대형반인륜범죄에 대해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려는 우리 거리의 요구는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족의 지향과 남녘민심에 도전해나서는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페당이야말로 친일로 잔재가 굳어지고 친일이 아니면 순간도 살수 없는 메국의 무리라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현실은 남조선에서 보수페당의 친일애국적망동이 우심해질수록 이를 반대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더욱 고조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김경수



성노에범죄라고 하면 제일먼저 떠오르는 나라 바로 일본이다.

그것은 일본이 지난세기 전반기 수십만명에 달하는 조선과 세계 여러 나라 여성들에게 치욕스러운 성노에의 운명을 강요하고도 세기가 바뀌도록 후조의 반성조차 없이 오히려 그것을 합리화해나서는 가장 추하고 후안무치한 범죄국가이기때문이다.

일본의 성노에제도는 철두철미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일환이었다. 성노에제도의 피해자로 된 나라와 민족, 여성들가운데서도 가장 처참하고 참혹한 피해를 본것은 바로 일제의 발골밑에 무참히 짓밟혔던 조선여성들이었다.

1918년 일본당국은 《근대의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의 성적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변태적인 논리에 기초하여 성노에제도를 내몰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20년대부터 다른 나라 여성들에 대한 람치, 강제연행이 광공연히 감

#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 수십만의 조선여성들을 짓밟은 성노에범죄

행되었으며 대륙침략과 대평양전쟁 전기간 지속되었다. 당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있던 왜왕은 여성들에 대한 람치, 강제연행을 해외 파견군의 참모부장 담당하게 하고 필요에 따라 목군성이 지시를 내려 집행하게 하였다.

성노에제도는 이렇게 왜왕의 직접적인 지령밑에 나왔으며 군부는 성노에확보를 위해 조선과 아시아지역의 여성들을 마구 람치, 강제연행하였다.

조선여성들에 대한 일제의 람치, 강제연행만행은 그 수법에 있어서 중세기적노예사냥을 방불케 하는 참으로 잔악한것이였다.

일제는 깊은 밤 농가를 습격하여 여성들을 잡아갔으며 낮에는 논밭에서 일하거나 길가던 여성, 우물가에서

발레하던 여성들을 자동차에 강제로 짐짝처럼 견어내고 달아나곤 하였다. 20살안팎의 처녀들은 물론 애기어머니와 결혼식을 앞둔 약혼녀까지 람치, 강제연행하였다.

한 일본군성노에생존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16살 나던 해에 어머니가 마을처녀들을 사냥하러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와서 너도 위험하니 산골에 있는 삼촌어머니집에 가서 숨어있으라고 했다. 그때 관헌이 달려들어 딸을 내놓으라고 어머니를 구두탈로 차고 위협했지만 어머니는 완강히 버텼다.》

다섯후 나는 삼촌어머니집에 가 숨으려고 점심밥을 먹고 집을 나섰다.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얼굴을 가리우고 산길을 혼자서 걸

어갔다. 1시간쯤 걸었을 때 갑자기 일본군이 나타났다. 주먹에 얼굴을 얻어맞고 코피가 터져 얼얼해진 나를 자동차에 올려싣었다. 자동차에는 나처럼 불잡혀온 처녀가 40명가량 있었다.》

일제는 이렇게 끌려간 조선여성들을 성노리개로 회용하다가 무참히 학살하였다. 성노에로 끌려간 여성들은 매일 수십명의 일본군호색광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야 하는 악몽같은 노예생활에 시달려야 하였다.

일제는 여성들을 좁은 방에 한명씩 밀어넣고 때를 지어 달려들어 통욕하다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하여 군도로 목을 쳐죽였는 가 하면 집단적으로 생개장하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어 살아있는 여성들의 목에 걸어놓고 쾌락을 느끼는

장하여 죽인 친화의 살인악귀들이 바로 일본제국주의자들이다.

# 성노에범죄

사람가죽을 뒤집어 쓴 일제야수들의 온갖 폭행과 무차별적인 살륙광기로 하여 성노에로 끌려간 수십만명에 달하는 조선여성들의 대부분이 살아돌아오지 못하였다.

일본의 성노에범죄야말로 여성들의 인권을 무참히 잔도질한 전대미문의 특대형반인륜범죄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일본이 침략전쟁터에 끌고간 조선여성노예피해자들

#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야스구니진자로 가라》

최근 남조선에서 전 북쪽군모총장 백선엽의 죽음을 계기로 친일애국노인 이자를 《영웅》으로 미화하는 보수계 리들의 망동을 규탄하는 각계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백선엽은 2009년 남조선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다고 한다. 이자는 일제강점시기 만주군 소위로,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고 사살하는데 앞장선 친일애국노인이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적계파리들은 백선엽을 《전쟁영웅》, 《창군원로》로 피어올리며 《서울현충원에 자리를 내서라오안장해야 한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행태는 친일적페우리들의 추악한 망동이다. 25개의 독립운동가선양단체들로 구성된 《함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의 현충원안장장기행정에 정악을 금지 못한다.》,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에게 상처주지 말라.》고 격문을 표시하였다. 남조선의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와 맞서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가 죽어서 친일반민족행위자와 동거해야 하는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고 하면서 《백선엽의 대전현충원안장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15일 독립유공자유족회 대전지부 회원들을 비롯한 각계층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집회를 열고 《친일반민족행위자 간도특설대 백선엽의 현충원안장을 반대한다.》, 《간도특설대 장교출신 민간인학살주범 백선엽은 일본야스구니진자로 가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투쟁을 고조시켰다.

본사기자